

# 경총 “효과 미미, 법 집행에 혼란…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처벌중심 기존의 법 없애고 ‘예방법’ 법명 개정도 의미있어”  
“기소까지 8개월… 수사 장기화 법률 모호성 등 부작용 현실화”

노동계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정부 법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



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안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 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 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 1면 ‘대응부족 중소기업’서 계속

### “중기 99% 오너가 대표 대표자 구속뎀 문 닫아”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 우려는 법 시행 이전부터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7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96.4%인 647곳이었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80.3%(539곳)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이면서 대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 정치권 등을 향해 수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해 지난달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13.5%, ‘모르겠다’는 11.3%였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곳은 ‘전문 인력 부족’과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61.7%로 ‘긍정적 영향’(29.5%) 답변보다 두배나 많았다. 89.8%는 내년에 법 적용이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 유예’ 또는 ‘법 적용 예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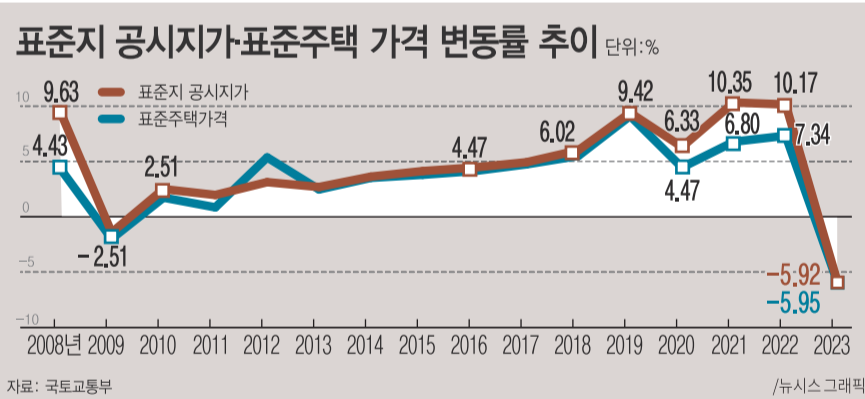
#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보유세 부담 완화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5.92% ↓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2% 하락했고,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

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주요기업 50% 사회공헌 지출액 늘렸다

전경련, 2021년 사회적가치 보고서 이유 22% ‘코로나로 인한 요구 증가’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회 공헌 노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사회공헌 지출액을 전년 대비 늘린 기업은 50.5%나 됐다. 이 중 26.5%가 25% 이상 증액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공헌에 힘을 들인 이유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22.1%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요구 증

가’를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신규 론칭(20.5%)’, ‘경영성과 호전에 따른 사회공헌예산 증가(17.2%)’ 순이었다.

사회 공헌 지출액을 줄인 45.5%도 앞으로 사회 비용에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46.5%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16.3%는 ‘긴급 구호, 국가적 행사 등 당해연도 이슈 부재로 비용 감소’라고 밝혔다.

사회공헌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55.9%)’이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이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교육·학교·학술(13.1%)’과 ‘문화예술 및 체육(11.4%)’에 대한 지원도 많았다.

/김재용 기자 juk@76